

보도시점 2025. 4. 16.(수) 10:00 / 배포 2025. 4. 16.(수) 08:30

##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 자영업자 대상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홍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 행위 대응 전담팀(이하 ‘TF’)」은 '25년 1분기 수사 의뢰 검토회의를 개최 하여, '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였고 이 중 7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

### <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수사 의뢰 검토회의 개요 >

- [일 시] 2025. 3. 27.(목) 14:30
- [장 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
- [참 석 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회의주제] '25년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검토 및 수사 의뢰 대상 선별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 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 접속 →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 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 신고 절차 등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 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25.2분기 중)

한편,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先)제공 금지, ▲최종 결제 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문성 (044-200-4430)
		담당자	사무관	박윤정 (044-200-4434)